

[ 국제 ]

# “정면 충돌 VS 대타협” 日 정국 기로

### 복귀한 오자와 대표 ‘신테러법 제정 반대’ 재천명 중의원, 신테러법안 가결 참의원 회부 공방 예상

“정면충돌이나 대타협이나” 일본 정국이 기로에 처해 있다.

지난 7·29 참의원 선거에서 원내 1당으로 도약한 민주당과 중의원 과반수 장악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이 정면 충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총재인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의 대연정 논의의 과문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복귀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당의 명운을 걸고 있는 ‘신 테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양측간 전선이 갈라지고 있다.

◇**새 테러법안**=이 법안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다국적군의 활동에 대한 인도양상에서의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다.

여당이 자민, 공명 양당은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법안은 야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으로 곧바로 회부됨에 따라 처

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 뿐 아니라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려는 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안과 인사 동의안을 끝내 민주당이 부결시킬 경우 후쿠다 총리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여권은 어쩔 수 없이 중의원에 해산에 이은 조기 총선거를 택할 수밖에 없다. 벌써 내달 해산에 이은 1월 총선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여론**=민주당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에 대한 긍정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50.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과반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테러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지층이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쿠다 야스오(왼쪽) 일본 총리가 13일 중의원 본회의의 도중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의원은 이날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 재개를 위한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찬성 다수 속에 가결시켰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여야 선택은**=이런 상황은 반대로 여권으로서도 기회가 되고 있다. 후쿠다 총리와 자민당은 신 테러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조사를 차지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과반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대연정 과문 이후 전보다 약화된 여론 때문에 설블리 총리 불신임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자와 대표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반법 제정과 급유지원 활동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놓고 후쿠다 대표와 논의했다는 말도 여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 테러법이나 산하기관장 인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도쿄=연합뉴스

# “마하 5...전세계 어디든 2시간내 타격”

### 美 극초음속 폭격기 개발 박차

미국이 우주 공간을 이용한 전쟁시대에 대비, 전세계 어느 곳이든 2시간내에 재래식폭탄이나 정밀유도탄두로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Hypersonic) 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미 정부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신속 글로벌 타격 프로그램’에 1

억달러의 예산을 반영한 데 대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는 해군의 잠수함발사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비 및 공군의 ‘공동비행체’ 개발비 등 예산을 돌려 1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팰콘(Falcon)’이라고 명명된 이 ‘신속 글로벌 타격 프로그램’은 폭탄 등 1만2천파운드(5천400kg)의

무기를 싣고 2시간이내에 9천마일(1만6천km)을 날아갈 수 있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비행체(HCV·Hypersonic Cruise Vehicle)를 개발하는 것이며 특히 비행체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본토에서 전세계 어느 곳이든 2시간내 타격이 가능하다. /워싱턴=연합뉴스

# ‘北, 테러지원국 해제’ 이번주 고비

### 16일 미·일 정상회담 주목

현지시간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와 그에 앞선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당시 양해사항 등을 통해 북한의 연내 신고·불능화 이행에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절차는 일단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미국 역시 테러지원국 해제·적성국교역법 종료 위한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 합의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았다. 일본이 자국민 납북자 문제가 진전되기 전에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데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일 정상회담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문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은 묘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미국이 한 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빼려면 그 조치가 발효되기 45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미국이 북의 신고·불능화 이행 시한에 맞춰 테러지원국 문제를 연내에 해결한다고 할 경우 16일이 그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유력 동맹국 총리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정상회담 당일이나 그 직전에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일 정상회담의 택일을 계기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 비상사태 불구 부토 집회 안막아 무샤라프-부토 반목은 연극?

‘부토에게 국가 비상사태는 없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계엄에 준하는 철권통치로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고 있지만 반정부세력의 핵심 인물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만은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토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특별대우를 놓고 무샤라프와 부토 사이에 밀약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무샤라프는 지난 3일 비상사태 선포 직후 이프티카르 초우데리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해임하고 주요 야당 지도자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연금에 나섰다.

그러나 무샤라프는 정작 최대 적적이 될 소지가 큰 부토에게만은 비상사태 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부토 역시 두바이에서 돌아온 뒤 한동안 침묵했다. 부토가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당시 잠시동안 가택 연금 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불과 하루만에 해제됐다.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라왈핀디에서 열기로 했던 첫번째 대중집회가 정부측 방해로 무산된 뒤 두번째 집회 예정지인 라호르로 향하는 길에는 경찰의 특별 경호팀까지 따라붙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무샤라프와 부토가 표면상으로는 충돌하고 있지만 실상은 뒷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 中 때아닌 ‘천도론’ 시골 베이징 문제 많아 대체수도 제안 봇물

### 베이징 문제 많아 대체수도 제안 봇물

중국에 때아닌 수도 이전 논쟁이 불붙고 있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한때 거론됐던 천도(遷都) 문제는 최근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마이신 연구원이 워신 중문판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면서 재연되기 시작했다.

마이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현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에서 장강 중하류에 위치한 화동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元)과 명(明), 청(淸)나라가 당초 베이징으로 정도(定都)한 이유가 현대 중국에 와서는 이미 사라졌다는 게 근거였다.

마이 연구원은 “원·명·청이 베이징을 도읍으로 삼은 것은 주로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명나라 성조가 ‘천자는 마땅히 번방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천도한 것에서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엔 동방에서 접근해오는 서구가 북방을 대신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최대 세력이 됐으며 지금처럼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전한 상황에서 ‘천자수변(天子守邊)’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마이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2천만명의 거대 인구를 가진 대도시 베이징의 수자원 부족과 인구팽창, 대기오염, 사막화 위험 등 난제를 감안하면 장강 중하류의 중소도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연합뉴스

# “한국 지뢰밭, 여의도 면적의 3·8배”

### ICBL “전국 1천300곳 32km에 매설” 北 지뢰, 앙골라·수단 등지에서 발견

비정부기구인 ‘지뢰금지 위한 국제캠페인(ICBL)’은 12일 ‘2007 지뢰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는 1천300곳, 총 32km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거나 과거 한국전쟁때 폭발하지 않은 지뢰가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8.5km)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뢰오염지역 22km보다 10km(45%)나 넓은 것이다. ICBL은 또 한국 정부가 올 4월 항공기 등으로 살포하는 ‘KM74’라는 자폭형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5월에 한국이 처음으로 대인지뢰 보유량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올 4월에도 M2, M3, M14, M16, M18 등 자폭능력이 없는 지뢰 38만2천900기와 자폭식 대인지뢰인 M74 2만4천900기 등 모두 40만7천 800기의 지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대인용지뢰 110만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한국은 올 4월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와 후방의 군사통제지역(MCZ) 1천300곳, 32km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거나 한국전쟁때 사용된 폭발물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이는 지난 2003년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뢰지역 21.8km보다 상당히 넓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어 ICBL은 북한의 지뢰문제와 관련, 북한의 지뢰보유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거에 앙골라와 수단 등지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언급,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뢰를 수출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연등산업이 빚어낸 필경되는 난방

“칼레오” 방직의신 필경난방이 핵심입니다.

- 1.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2.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3.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4.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1.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2.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3.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 4. 방직의신 필경난방은 방직의신 필경난방의 핵심입니다.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냄새,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난방비 절약! 탁월한 공기 순환! 쾌적합니다!

**무등산업** (주)무등산업 TEL: (062)262-0101